

# 각 당 정책위의장 토론 핵심 내용

11월 6일 “선택 2007!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”에서 3부 행사로 진행된 각 당 정책위의장 패널토론에서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, 농협중앙회 및 농관관계관 개혁, 한-미 FTA 등 농업 전반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대책이 제시됐다. 정책위의장들은 어려운 농업·농촌 현실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며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방법론에서는 당에 따라 시각차를 드러냈다. (편집자 주)

## # 각 당 정책위의장 참석자



## # 패널리스트

△윤석원 중앙대학교 교수<좌장> △김호 단국대학교 교수 △최지현 농경연 기획조정실장  
△윤주이 본보 상무이사 △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 △정기환 농민연합 집행위원장  
△정광호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

### 1. 쌀 목표가격 인하 및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조정·법제화 문제

구분	대통합민주신당	한나라당	민주노동당	민주당	국민중심당	창조한국당
①쌀 목표가격 인하 관련	반대	▲향후 5년간 현행 수준 유지 ▲여당 반대시 소 득보전비율을 상향 조정	▲상향 조정 ▲기준가격 설정은 지역 실정에 맞게 ▲장기적으로 목표 소득제로 전환	반대	반대	반대
②식량자급률 법제화	반대 (예산·지원제도, 국제통상 등의 문 제 제기 가능)	반대	찬성	찬성	찬성	-
③식량자급률 목표치	-	-	50% (5개년계획 수립· 실천, 학교급식과 연계)	40% (대체작물 육성 등 을 활용)	-	중소기업 활성화로 도시 소득 향상되 면 국산 농산물 소 비 증대

## 2. 농협중앙회 및 농업관련기관·공기업 개혁

구분	대통합민주신당	한나라당	민주노동당	민주당	국민중심당	창조한국당
④농협중앙회 관련	-	▲경제·유통사업 위주 개편 ▲농협 스스로 개 혁하지 못할 경우 법 개정 등 개혁 압 력 필요	▲신용부문은 농업 은행으로 전환 ▲농협중앙회는 경 제사업에 집중	▲신용·보험사업 은 조속히 민영화 ▲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구조개 혁 필요	-	-
⑤농수산물유통 공사·한국농촌 공사 관련	-	-	-	-	▲유통공사는 농산 물 수출조직으로 강화 ▲농촌공사 상위직 직원을 줄이고 하 위·기술직을 강화	▲유통공사를 수 출이 가능하도록 강화

## 3. 농림부로의 식품업무 이관 및 학교급식 관련

구분	대통합민주신당	한나라당	민주노동당	민주당	국민중심당	창조한국당
⑥농림부로의 식품업무 이관	▲농식품 산업· 소비자 안전문제를 관련 부처가 담당 하는 게 추세 ▲식약청 업무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	▲원칙적 동의하나, 식품안전 부문 이 관은 신중해야 ▲원산지표시제 활 성화 위해 RFID(전 파식별) 보급	▲농정공약에 농림 부 개편안을 이미 반영	▲수요자 중심, 사 전예방 중심의 식 품안전체계 마련이 시급	찬성	▲식품, 환경, 소비 자를 포함해 확대 개편돼야
⑦학교급식 관련	▲교육지원과 함께 예산지원을 확충	▲우리 농산물 사 용을 전제로 예산 확대돼야	▲우리 농산물 사 용을 전제로 예산 확대돼야	▲장기적으로 무상 급식 실현	▲국내 우수 농산물 부터 이용. 점진적 으로 친환경농산물 이용토록 예산 확보 ▲장기적으로는 학 생들에게 무료급식 까지 지원해야	▲100% 완전 유기 농산물로 하더라도 추가 소요재원은 1 조원 정도일 것. 아 토피 등을 감안하 면 실현 가능

#### 4. 한-미 FTA 국회비준 저지에 대한 입장

구분	대통합민주신당	한나라당	민주노동당	민주당	국민중심당	창조한국당
⑧한-미 FTA 국회비준 저지 및 폐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선대책-후비준 입장</li> <li>▲FTA 관련 종합 대책 마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선대책-후비준 입장</li> <li>▲FTA 관련 종합 대책 마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한-미 FTA 결사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선대책-후비준 입장</li> <li>▲FTA 관련 종합 대책 마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국정조사로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 대책을 세운 뒤 비준해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한-미 FTA 비준 추진시 대농민 타격이 심할 것이므로 비준 반대</li> </ul>

#### 5. 농업회의소 설치에 대한 입장

구분	대통합민주신당	한나라당	민주노동당	민주당	국민중심당	창조한국당
⑨농업회의소 설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농업관련 기관·단체에 농민 지도자의 참여 시스템을 만들고 경험을 쌓도록 해야</li> <li>▲이후 농관련 조직들을 통합토록 단계적으로 추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폭넓은 정책과 함께 중앙·지방 정부 추진 사항을 정하는 메카니즘을 가져야</li> <li>▲이 틀에서 농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회의소 설립 검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한-미 FTA 등의 사회적 합의가 깨진 현실에서 정부와 농민간 협조가 잘 될지 의문</li> <li>▲농업을 기간산업으로 하는 협약 후,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구 구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,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각적 검토가 필요</li> <li>▲재정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중해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농업회의소 설치에는 초기에 설립 자본 지원이 필요</li> <li>▲기존 조직을 개편·활용하고, 필요시 설립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농업부문 자치기구 확대에 적극 찬성</li> <li>▲그러나 어떠한 효과를 낼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</li> <li>▲참여 주체의 능력을 제고해 농민에게 도움 되도록 해야</li> </ul>

#### 6. 농업예산 확충

구분	대통합민주신당	한나라당	민주노동당	민주당	국민중심당	창조한국당
⑩농업예산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농업예산 확충 필요</li> <li>▲투융자가 농민을 위해 쓰였는가 의문</li> <li>▲농협 등 농관련 기관의 개혁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농촌 의료서비스 개선, 농가부채 해결 등을 위해 예산이 필요</li> <li>▲매년 7%대 고도 성장 정책의 수익을 농어촌에 투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한국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몰락, 7% 성장론 큰 의미 없어</li> <li>▲농림예산 확충 아닌 특대책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전체 인구 중 농업인구는 7% 내외, 농림예산 규모 늘리는 참고사항 대야</li> <li>▲예산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, 농가 경쟁력 높여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FTA를 대비, 농림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10%까지 확대</li> <li>▲대통령의 농업회생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종합적 측면에서 농정예산 확충해야</li> <li>▲일본처럼 주민세 10%를 '고향세'로 전환하는 방안도 도입</li> </ul>